

1 2022년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공공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 유형 중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②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 유형 중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다.
- ⑤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지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해설

①③ (×)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 불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 한국조폐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

공기업 (36개)	시장형 (1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강원랜드
	준시장형 (21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주식회사 에스알
준정부 기관 (94개)	기금관리형 (13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근로복지공단
	위탁 집행형 (81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독립기념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아시아문화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타 공공기관 (220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특허정보원, 서울대학교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한국장기기증조직원, 예술의 전당, 국악방송,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④ (○) ☒ 공공기관의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① 직원 정원 : 50명 이상, ② 총수입액 : 30억원 이상, ③ 자산규모 : 10억원 이상		공공기관 중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정부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큰 기관으로 정부가 자체수입 비율·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기업으로 지정한 기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지정*주1)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지정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①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②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	업			

※ 주1)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

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답 ④

2 다음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성과·만족이론 - 포터와 롤러(Porter and Lawler)
- ② 동기위생이론 - 허즈버그(Herzberg)
- ③ ERG이론 - 앨더퍼(Alderfer)
- ④ 성취동기이론 - 맥클리랜드(McClelland)
- ⑤ 욕구계층이론 - 매슬로우(Maslow)

해설

① 포터와 롤러(Porter and Lawler)의 성과·만족이론은 과정이론, ②③④⑤는 내용이론(욕구이론)

☒ 동기부여이론의 유형 - 내용이론(욕구이론)과 과정이론

내용이론(content theory), 욕구이론(need theory)	과정이론(process theory)
행위를 야기하는 원인(욕구) 확인에 초점 - 무엇(what)이 행동을 유발하는가? ⇨ 욕구(욕구의 내용) 행동과 원인(욕구) 간의 인과관계의 분석. 사람 마음속의 무슨 요인(욕구)이 행동을 유발·유지시키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가? - 어떻게(how) 행동이 유발되는가? ⇨ 동기유발 과정 행동과 다양한 원인 간 인과관계의 매개경로 분석 동기유발 변수와 동기유발 과정 상호간 관계를 밝힘
인간의 행동을 작동시키고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며 유지시키는 내적 요인에 초점. 인간의 욕구와 욕구에서 비롯되는 충동, 욕구의 배열, 유인 또는 달성하려는 목표 등을 설명.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충족을 위해 여러 가지 행동 대안 중 어떠한 방법으로 행동선택을 하는가에 초점.
1. 전통적 동기이론 ① 합리적 경제적 인간모형 : 과학적 관리론, X이론과 관련 ② 사회적 인간 모형 : 인간관계론, Y이론과 관련 <hr/> 2. 자아실현적 인간 모형(성장이론, 현대적 모형) ① Maslow의 욕구계층론 ② Alderfer의 ERG이론 ③ 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 ④ McGregor의 X·Y이론 ⑤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⑥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⑦ Likert의 관리체제론 ⑧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hr/> 3. 복잡한 모형 ① Schein, ②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주1)}	1. 기대이론 ① Vroom의 선호·기대이론(VIE이론) ② Porter·Lawler의 성과·만족이론 ③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④ Atkinson의 기대모형 2. Adams의 형평성(공정성) 이론 3. 학습(강화·순치)이론 4. Locke의 목표설정이론 5. Kelly의 귀인이론

※ 주1) 직무특성이론을 과정이론으로 보는 견해(이종수 외 새행정학 2.0)도 있음.

답 ①

3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와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실적주의 - 정치적 중립성	㉡대표관료제 - 사회적 형평성 제고
㉢엽관주의 - 행정논리	㉣대표관료제 - 효율성 강화
㉤직업공무원제 - 정치논리	㉥엽관주의 - 국민 대응성 약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만 옳음.

㉢㉣ (x) 엽관주의 - 행정논리(능률성·전문성)보다는 정치논리(민주성·대응성·책임성) 강조

㉤ (x) 대표관료제 - 능력과 무관한 채용으로 인한 효율성·생산성 저하 우려

㉥ (x) 직업공무원제 - 정치논리보다는 행정논리 강조. 따라서 민주통제 곤란.

☒ 인사제도의 종류와 이념 (x : 약함, △ : 중간, ○ : 강함)

인사제도	능률성, 자율성, 도구성·중립성	전문성	민주성·대응성·정치성	책임성	형평성
엽관주의	x	x	○	△	x
실적주의	○	○	x	x	△
직업공무원제	○	x	x	x	x
대표관료제	x	x	○	○	○

• 엽관주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을 공직에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통제 강화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료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정당의 사병화가 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저하를 초래.

• 실적주의는 임용기회 면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수평적 평등을 확보하지만, 대표관료제는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반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임용가능성을 보장하므로 수직적 평등을 확보할 수 있음.

답 ①

4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훈련 수요 파악 및 근무성적평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② 직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③ 전문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으므로 분화된 산업사회에 적합하다.
- ④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통해 조직 및 직무환경의 변화 대응에 용이하다.
- ⑤ 동일직무·동일보수 원칙에 입각한 직무급 수립이 용이하여 보수의 형평성이 높다.

해설

① (○)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적 기준 제시 및 교육훈련수요의 명확한 파악에 기여한다.

② (○) 횡적인 직책 한계와 종적인 지휘·감독관계가 분명하여 권한·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므로 행정활동의 중복과 갈등을 예방한다.

- ③ (○) 직위분류제는 산업사회의 등장과 직종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직무의 합리적 분류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등장하였다.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렬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며 직무중심적 동기유발을 자극한다.
- ④ (×) 직위분류제는 조직과 직무변화에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 지나친 직무구조의 편협성, 비탄력적 분류체계 때문에 직무변화 상황(잠정적·비정형적 업무)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
- ⑤ (○)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equal pay for equal work)에 입각한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고, 보수체계의 형평성(직무수준 [책임도·곤라도]과 보수수준의 균형) 확보한다.

답 ④

5 성과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를 중심으로 개인을 평가한다.
- ② 개인성과평가 등 추가적 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③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조직 공정성을 제고한다.
- ④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에 기여한다.
- ⑤ 고정적이고 엄격한 서열화로 인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킨다.

해설

- ② (×) 성과주의는 개인성과평가 등 추가적 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연공주의는 개인성과평가 등 추가적 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연공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엄밀한 개인성과평가 등에 따른 추가적 관리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성과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신 등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비교

구분	연공주의(seniority system)	성과주의
의의	조직 내 구성원의 서열을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결정하고 이러한 연공서열에 따라 구성원에 대한 보상여부와 수준을 결정	연공서열에 따른 비경쟁적 인사관행을 혁신하고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경쟁과 자발적 몰입을 통해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업무수행을 조직의 성과와 연계시킴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직 내 계층적 서열구조의 확립을 통해 개인의 안정감 증진 ② 장기근속에 따른 조직에 대한 충성심·기여도 향상 ③ 조직 내 경쟁 완화를 통한 협력적 관계 형성에 기여 ④ 개인성과평가 등 추가적 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정적이고 엄격한 서열화로 인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 ② 개인의 성과수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③ 조직 내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개발·자아실현에 기여 ④ 성과주의에 따른 조직효과성 증대로 조직구성원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 수준 향상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및 신입사원 채용 중심 일반적 선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 및 경력사원 채용 강화 전문성과 창의성 중심의 선발 기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도와 근속연수 중심의 평가 모호하고 불투명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와 능력 중심의 평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보상·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급과 연차 중심의 연공 승진 연공형 월급제, 고정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급 파괴 및 성과·역량에 의한 승진 연봉제, 성과급제 등
퇴직	평생고용	조기 퇴직, 전직 지원 활성화

답 ②

6 공직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패의 접근법 중 체제론적 접근법은 복합적 요인보다 하나의 변수에 의해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② 백색부패는 흑색부패와 달리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가 아니다.
- ③ 권력형부패는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부패행위이다.
- ④ 거래형부패는 뇌물을 주고받아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특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이다.
- ⑤ 비거래형부패는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해설

- ① (×) 공직부패의 원인에 대한 체제론적[체계적] 접근법 : 부패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부패에 대한 지엽적·부분적인 대응만으로는 부패를 억제하기 곤란하다고 봄. 부패현상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용이하나 부패통제 수단을 손쉽게 처방해주지는 못함.

- ② (○) 사회구성원의 관용도(부패의 용인가능성)에 따른 부패 유형

흑색부패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처벌을 원하며 형법·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관련 법 등에 처벌조항을 둠.
백색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심리적으로 용인되고 합리화되기 때문에 사회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부패의 정당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큰 확산의 동기가 됨 ②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예) 금융위기사 "한국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라고 한 경제관료의 거짓말). 비록 공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에 해당되지만 사익을 추구하려는 악의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뿐임.

회색부패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중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 비난과 용인 사이에서 일치점을 찾기 어려움.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으나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예) 촌지, 소액규모의 접대 등
------	--

③ (○) 부패의 규모에 따른 부패 유형

생계형 부패	하위직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 생계유지 차원에서 저지르는 부패. 작은 부패 (petty corruption)라고도 함. 방지 방안으로 적정 보수(생계급)의 지급이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계형 부패와 달리 부의 축적을 위한 부패를 치부형(致富型) 부패라고 함.
권력형 부패 (정치부패)	주로 정계·관계·재계의 권력엘리트들이 결합하여 발생하며 정치인이 주축이 되므로 정치부패라고도 함. 관료부패보다 더 암묵적이고 노출되지 않으며 주로 정책결정 이전 단계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에서 관료부패와 성격이 다름. 희소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초과적인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것이므로 엄정한 적발과 처벌, 공정한 법집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④⑤ (○) 부패의 성격에 따른 부패 유형

직무유기형 부패 (복지부동)	시민이 개입되지 않은 관료 개인의 부패로서, 직접적이며 명백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직무를 게으르게 하는 데에서 오는 부패.
후원형[정실형] 부패(정실주의)	관료가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으로 후원하는 부패. 직무유기형 부패처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음.
사기형[단독형·비거래형] 부패 (공금유용·횡령·회계부정)	상대방과 직접적 이익교환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일방적 부패(비거래형 부패)로서 의도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공금유용·횡령·회계부정 등을 통해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며 대개 형법상 범죄에 해당.
거래형 부패(뇌물수수)	가장 전형적인 부패, 공무원과 시민이 뇌물을 매개로 이권이나 특혜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쌍방적 부패.
위협형 부패 (갈취형·공갈형)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치나 결정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조치나 결정을 구실로 금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공무원 부정행위.
독직(瀆職)행위	공직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답 ①

7 우리나라의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과 기금 모두 국회 결산 심의의 대상이다.
- ②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 모두 통합예산에 포함된다.
- ③ 일반회계예산은 조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 ④ 집행절차 측면에서 예산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에 비하여, 기금의 경우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은 편이다.
- ⑤ 기금의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운용평가 등의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

해설

①③④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설치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① 특정사업 운영, ② 특정자금 운용, ③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충당 법률로써 설치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을 재원 무상급부 원칙 - 일반보상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유상급부(배제성) - 개별보상 가능	정부출연금·민간임의출연금·외부차입금·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재원으로 다양한 목적사업 수행
수립 및 확정절차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 편성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기획재정부장관과 기금운용주체간 협의·조정
통일성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통일성 원칙의 예외)	
완전성	정부 예산		예산 외로 운영(완전성의 예외)
집행상 재량성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특별회계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큼)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이용(국회의결 필요), 전용, 이체 국가재정법정 사유에 해당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초과 변경안은 국회 제출 필요
결 산	감사원의 결산 검사, 국회의 결산심의회 승인(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② (×)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

구 분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범위	통합재정	국회 심의·의결
금융성 기금	30% 이하(국회 제출 없이 변경 가능)	통합재정에 포함 안 됨	국회 심의·의결 대상
비금융성 기금	20% 이하(국회 제출 없이 변경 가능)	통합재정에 포함 됨	

10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적평가(계량평가)는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 ② 질적평가(비계량평가)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③ 진실험 평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 ④ 준실험 평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적으로 배정한다.
- ⑤ 비실험적 평가에서는 주로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와 인과모형에 의한 방법 등이 활용된다.

해설

①② (○) **계량평가(양적 평가)와 비계량평가(질적 평가)**

계량평가(양적 평가) : 객관적 평가	비계량평가(질적 평가) : 주관적 평가
주로 정책집행 결과 나타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	정책사업 수행 과정의 난이도,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 결과 등을 평가
인과관계의 발생정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how many) 있는가를 분석	해석적·창의적·개인적·서술적 접근을 하며 무엇이(what), 어떻게(how) 이루어졌는지 분석.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음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있음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	주로 귀납적 방법을 활용
통계, 실적치, 비율 등 수치화되어 있는 강성자료(hard data) 활용	주로 면접, 관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축적된 연성자료(soft data) 활용

- 주로 효과성 평가는 양적 평가에 의존하고, 집행과정평가는 질적 평가에 주로 의존. 집행과정평가는 기획한 대로 자원이 투입되었는지 또는 제 활동 등이 사업계획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며 '얼마나 많이(How many) 있는가?' 보다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What things exist?)'에 관한 분석에 의존하므로 양적 방법보다는 질적 방법에 의함.
- 질적 평가 자료의 원천 : ① 심층 면담(정보제공자의 경험·태도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방식), ② 집단 면담(여러 사람이 모여 포괄적인 의견 교환), ③ 참여자 관찰(참여자가 일일활동에 직접 참여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 ④ 투사법(projective technique ; 응답자가 답변을 주저하는 경우, 다른 사항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자료를 수집·분석)
- ③ (○) ④ (×) 진실험 평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적으로 배정하여 양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측정한다. 준실험 평가는 무작위배정에 의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등화를 꾀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 ⑤ (○) 비실험설계(non-experimental design, 비실험 평가)는 인과적 추론의 세 가지 조건(원인의 선행성, 공변성, 경쟁가설 배제)을 모두 갖추지 못한 설계, 즉 진실험과 준실험적 설계를 제외한 인과관계 추론 방법이다. 이는 실험설계의 원리에 의하여 정책의 효과를 식별하고 분리해 내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상관관계분석의 원리에 의하여 독립변수로서의 정책과 종속변수로서의 정책영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내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통계학과 사회과학의 발전에 따라 회귀분석, 인과분석 등과 같은 평가모형들이 발전되고, 이들이 정책평가에 응용됨으로써 정책영향의 평가에 공헌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계속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실험유형별 내적 타당성 제고 방법

실험 설계	진실험	무작위배정에 의한 통제(난선했화)	홀짝추첨방식의 무작위적 추출[배정](난선했화 ; randomization)에 의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동질적 통제집단 설계)하여, 외생변수(허위변수·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
	준실험	축조된 통제 (constructed control) 짝짓기(matching)	특정정책의 실시지역과 미실시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 무작위배정이 곤란할 경우 연구대상을 비슷한 대상끼리 둘씩 짝을 지어 하나는 실험집단에, 하나는 통제집단에 배정. 예)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사전·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설계, 회귀불연속 설계
재귀적 통제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통제집단 없이 동일한 집단에 대해 정책을 집행한 전과 후에 나타난 상태의 변화를 비교. 예) 단절적 시계열 분석,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단절적 시계열 설계 +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비실험 설계	통계적 통제 (statistical control)	정책에 참여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과의 차이를 통계적 기법(시계열분석 등)을 통해 추정해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추정·제거.	
	포괄적 통제 (generic control)	정책을 집행한 대상집단에 일어난 변화를 유사한 집단에 집행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전형적인 표준(그 사회의 전형적인 사망률, 남녀 간 성별비율 등)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판단.	
	잠재적 통제 (shadow control)	정책을 집행한 대상집단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전문가, 프로그램 집행자·참여자의 의견을 구해 정책효과를 판단	

답 ④

11 전자정부 또는 디지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개념은 「전자정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기술 및 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초점을 둔다.
- ②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 ③ 첨단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행정의 혁신이 중앙집권적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시민참여나 행정의 대응성은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
- ④ 이른바 '민첩한 정부(agile government)'는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민하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를 말한다.
- ⑤ 우리나라 전자정부 업무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설

- ①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 ③ (×) 첨단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행정의 혁신은 정보통신기반의 이용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전자민주주의를 실현시키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하므로 시민참여나 행정의 대응성은 확대될 수 있다.
- ④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1년 ‘The Future of Government: Lessons Learned from around the World’라는 보고서에서 “FAST(Flat, Agile, Streamlined, Tech-enabled) 정부”라는 미래정부가 지향해야 할 네 가지 개념을 제시.
㉠ Flat(평평한) 정부는 수평적인 조직을 지향하면서 정부조직 간의 협업과 정부정책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
㉡ Agile(기민한, 민첩한) 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향
㉢ streamlined(간결한) 정부는 관료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Red-Tape(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요식)’를 지양하면서, 행정서비스의 간소화 및 효율화에 초점을 맞춤
㉣ Tech-enabled(기술 활용 / 기술적 역량이 있는) 정부는 정부조직과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ICT, 블록체인, Big Data, AI 등 다양한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
- ⑤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답 ③

12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제고될 수 있다.
- ② 지방 간 갈등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지역의 입장에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 ④ 지방 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관계를 대등한 협조체제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해설

- ② (×) 지방 간 갈등 조정은 중앙집권의 장점이다.

답 ②

1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⑤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설

- ③ (×)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의사정족수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의장은 회의 중지나 산회[散會] 선포)
일반 의결정족수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봄(의장의 casting vote 권한은 없음).
특별 의결정족수	① 의원 자격상실 및 제명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②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③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치단체등의 사무소소재지 변경 조례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회의의 공개	공개 원칙. 단,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나 의장이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가능.
의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 x)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 위원회는 직무사항에 관해 의안 제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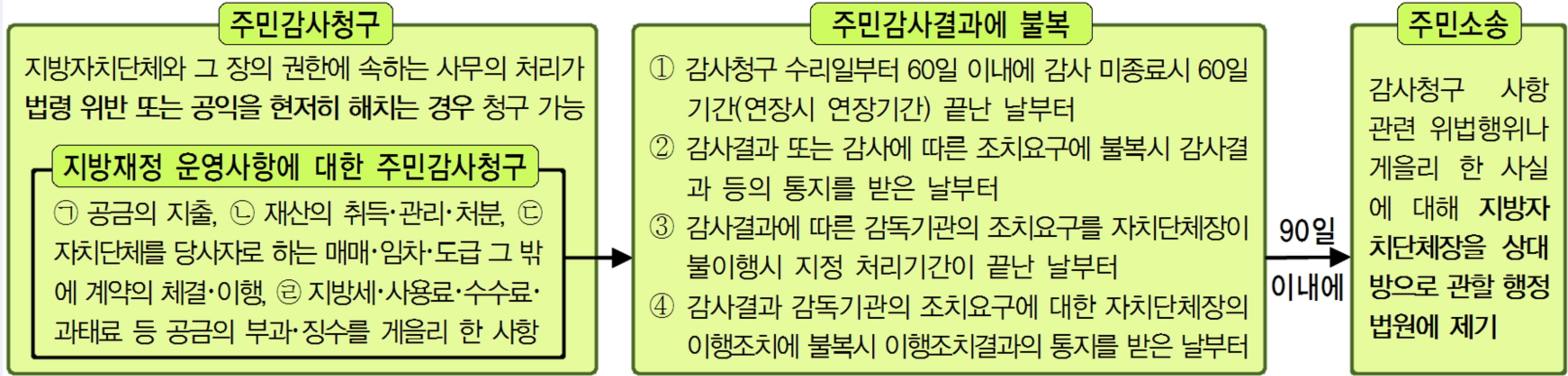
답 ③

14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소송은 주민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일종이다.
- ② 주민소송의 피고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이다.
- ③ 주민감사를 청구한 개인은 누구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⑤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있다.

해설

- ① (×) 주민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의 일종으로 소익을 요하지 않는다. 특정 주민의 이익보다는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의 일종이다.
- ② (×) 주민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
- ③ (×) 주민소송은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감사를 거쳐 제기할 수 있다. 주민감사를 청구했다라도 주민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④ (×)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⑤ (×)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정답 여부 : 발표된 답안은 ③이지만 주민감사청구 대상과 주민소송대상이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틀린 지문이므로 답 없음으로 본다.

답 없음

15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 ②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서 지방세의 세수확장에 한계가 있다.
- ③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교육재정이 별도로 운영된다.
- ④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수입원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 ⑤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설

- ① (○) 재정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법정 세목과 세율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결정(법정외세[法定外稅]) 및 세율 조정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지방세의 신축성·탄력성이라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제는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세목·세율·과세방법 등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법정세만 인정하고 법정외세를 부정하므로, 조례로 지방세를 만들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입각한 과세는 곤란하며 독자적 과세주권이 결여되어 있다. 세율의 경우 탄력세율이 도입되었지만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범위도 좁다. 따라서 지방세의 신축성이 약하다.
- ② (×) 지방세의 신장성 원칙은 세수(稅收)가 지역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재정수요도 증가하므로, 이에 충당할 자원 확보를 위해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는 세수의 신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가 자산과세(취득세·재산세 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어서 신장성이 약하므로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따른 재정수요 팽창에 대응한 자원확보가 곤란하다.
- ③ (○)



④ (○) 수입의 결정·실현의 주도성에 따른 지방수입의 분류

자주자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기능을 직접 행사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자원 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자주자원 비중이 클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안정적임.
의존자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는 자원 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⑤ (○) 지방재정법 제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답 ②

16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에 관한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직접성 ② 강제성 ③ 효과성
④ 가시성 ⑤ 자동성

해설

☒ 정책수단[행정수단]의 분류(L. Salamon)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기존 행정구조 활용성), 가시성을 기준으로 정책수단을 분류하고 그 효과(impact)를 각각 파악

(1) 강제성(coercion) :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를 제한하는 정도.

강제성	정책수단	효과성	능률성(효율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합법성, 정당성(정치적 지지)
높음	경제규제, 사회규제	높음	높음/낮음	높음	낮음	높음/낮음
중간	바우처, 공적 보험, 보조금, 공기업, 대출보증, 직접대출, 계약, 벌금[교정조세]	중간	높음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불법행위 책임[손해책임법], 정보제공, 조세지출	낮음	중간	낮음	중간	높음

(2) 직접성(directness) : 공공활동을 허가하거나 재원을 조달하거나 개시한 주체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정도.

직접성	정책수단	효과성	능률성(효율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합법성, 정당성(정치적 지지)
높음	공적 보험, 직접대출, 정보제공, 공기업, 경제적 규제, 정부소비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중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낮음	손해책임법[불법행위 책임],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3) 자동성(automaticity) : 어떤 정책수단의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특별한 행정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행정구조를 활용하는 정도(시장을 활용하는 정책은 자동성이 높음).

자동성이 낮은 수단(경제규제, 사회규제, 직접시행, 공기업, 정보제공, 공적 보험)에 비해 자동성이 높은 수단(바우처, 조세지출, 벌금, 손해책임법)은 상대적으로 능률성·관리가능성이 높고 효과성·형평성·합법성·정당성은 낮음.

(4) 가시성(visibility) : 정책수단에 투입된 자원들이 정규적인 정부예산과 정책리뷰 과정에 가시화되는 정도(예산 개혁 추세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

가시성이 낮은 수단(경제규제, 사회규제, 공적 보험, 손해책임법)에 비해 가시성이 높은 수단(정부소비, 공기업, 보조금, 직접 대출)일수록 능률성·형평성이 높지만, 법제화가 곤란하고 정치적 지지를 받기 어려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가시성이 높은 정책수단을 공공문제 해결에 활용하면 그만큼 더 국민에 의한 통제력은 높아질 수 있음.

답 ③

17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도 포함시키고 있다.
② 신제도주의는 이미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보다 변화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③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제도가 사람의 행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④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
⑤ 신제도주의는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또는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연구한다.

해설

①④ (○)

☒ 신제도주의 유파들의 공통점 :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에서 제도를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 ① 제도는 사회의 구조화된 어떤 측면을 의미하며,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에는 이런 구조화된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② 제도는 개인행위를 제약하며, 제도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행위는 규칙성을 지니므로, 원자화되거나 과소 사회화된 개인이 아닌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행위에 초점을 둔다..
③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이다.
④ 제도는 공식적인 규칙이나 법률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규범 및 관습도 포함한다.
⑤ 제도는 개별 행위자들의 선호를 넘어서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형성된 제도는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 게 아니다(제도의 안정성).

② (×) 제도는 개별 행위자들의 선호를 넘어서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형성된 제도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제도의 안정성). 다만 제도의 변화가능성도 인정하며 유파별로 제도 변화 원인을 다르게 본다.

구 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변화 원인	전략적 선택, 비용·편익비교, 결과성(consequentiality) 논리	동형화(isomorphism), 인지·상징흡수 적절성(appropriateness)의 논리	결절된[단절적] 균형, 외부적 충격 역사적 우연성

③ (○) 행태주의자들은 제도란 기껏해야 개인 행태의 단순한 총합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행태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기초한 역동적인 '행태'였기 때문에 자연히 제도는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 혁명 이후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제도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즉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와 같은 정치행태와 맥락에 대한 원자적이고 비사회적인 설명 방식을 거부하면서, '제도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는 행위자 및 그 행위자의 행태를 형성하는데 제도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심을 집중한다.

⑤ (○) 신제도론은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이라는 동태적 관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외생변수로 다루어졌던 정책 또는 행정환경을 내생변수로 보아 직접적인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종합적·분석적 연구에 기여했다.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설명한다.
 * 외생변수 : 모형 외부적으로 주어진 변수
 * 내생변수 : 모형 내부에서 상호관계가 결정되는 변수

답 ②

18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는 투입지향적 예산제도로써 사업의 성과보다 비용에 초점을 둔다.
- ②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System)에서는 주어진 자원 수준에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이 성과지표에 표시된다.
- ③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에서는 하향식 예산과정을 통해 자원배분 권한의 집권화가 강화된다.
- ④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의 핵심은 부서목표와 예산운영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 ⑤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 System)는 계획예산제도에 비해 장기적인 안목이 중시된다.

해설

⑤ (×) 영기준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에 비해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

- 계획예산 : 장기에 걸친 효과와 비용을 분석·평가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이 작성되므로 장기적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높여줌
- 영기준예산 : 매년 원점에서 사업 우선순위 비교. 현재 사업의 축소지향적 우선순위를 강조하므로 쇠퇴적 활동을 억제하며 장기적 안목의 결여로 국가적 차원의 장기계획을 위축시킴

답 ⑤

19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분배정책 - 연구개발 사업지원
- ② 규제정책 -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 ③ 배분정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④ 구성정책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 ⑤ 상징정책 - 국기 게양 행사

해설

① (×) 연구개발 사업지원은 국민에게 권리나 편의·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분정책에 해당.
 ④ (○) 국가기관 구성원인 공무원·군인에 대한 보수·연금제도는 구성정책
 cf) 노령연금은 재분배정책 / 최저임금제는 보호적 규제정책

답 ①

20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효용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소비행동을 하는 경제인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 ② 점증모형은 합리모형과 대조적으로 실제의 결정 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 ③ 점증모형의 단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혼합모형에서 나타난다.
- ④ 쓰레기통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지 않는다.
- ⑤ 최적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에서 출발한다.

해설

⑤ (×) Y. Dror는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과 정책결정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비판하고, 양자를 통합하여 이상주의(합리모형)와 현실주의(점증모형)를 결합시켜 최적모형을 제시.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의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봄. 다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직관과 같은 초합리성을 활용하여 결정함으로써 분석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봄.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의 결합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의 결합임. Y. Dror는 점증주의를 타성에 젖게 하는 반혁신적 정책결정이라 비판하고 점증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

경제적 합리성 (양적 모형)	합리적 결정의 효과가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합리모형을 적용하며, 정책결정에 투입될 자원·시간·노력 등을 정책결정의 각 단계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함.
초합리성 (질적 모형)	자원·시간·노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특히 선례가 없거나 매우 중요한 비정형적 결정에는 직관·영감·창의·판단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가 필요(합리적 요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

답 ⑤